

Executive Summary

□ 북한 미사일 발사의 영향과 대응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북한의 발사 의도는 위기 고조를 통한 對美 직접 협상 압박용과 미사일 개발 능력 과시를 통한 미사일 상품 가치 홍보,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 등의 목적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것 같다. 특히, 미사일 발사라는 북한식의 '대담한 접근법' 시도를 통해 북미 협상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벼랑끝 전술'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점을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우주왕복선 발사 시간, 림팩(한태평양 군사훈련) 기간 중에 맞췄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미사일 발사로 국내의 금융시장은 일제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다. 발사 직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외평채 가산금리와 환율이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하락하였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의 엔화는 약세를 보였고, 국제 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과거의 한반도 경제 불안 시에, 국내 금융시장은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대체로 1~2주 안에 소멸되었으며, 실물시장에서는 당해 분기보다는 다음 분기에 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의 발사는 1차 위기 때보다 다소 심각한 상황이어서 경제적 충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발사는 미국의 강경과 득세와 북한의 핵 개발 능력 보유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발사량도 1차의 1기에서 7기로 늘어났으며, 2~3기의 추가 발사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위기 국면은 3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미사일 위기 국면이 해소되는 '평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와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미국도 6자회담 속에 양자회담을 수용하는 경우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국내 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해 미국도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정밀 폭격(surgical strike)을 시도함으로써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파국 시나리오'의 경우이다. 이럴 경우,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대외 신인도 추락, 주가 폭락과 금리 상승, 남북 관계와 경협 중단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세 번째는 북미간 의견 대립으로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긴장 지속 시나리오'의 경우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는 북한의 추가적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무력으로 대응하지는 않으나 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체제가 강화되고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당국 차원의 대북 지원과 대화가 중단됨으로써 남북 관계와 경협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 특히, 3대 경협 사업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합의서 등과 같은 대규모 경협 사업의 외자 유치와 진전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하여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낮아짐으로써 해외 차입 여건이 악화되고, 주가 하락과 투자 심리 저하 등으로 내수 침체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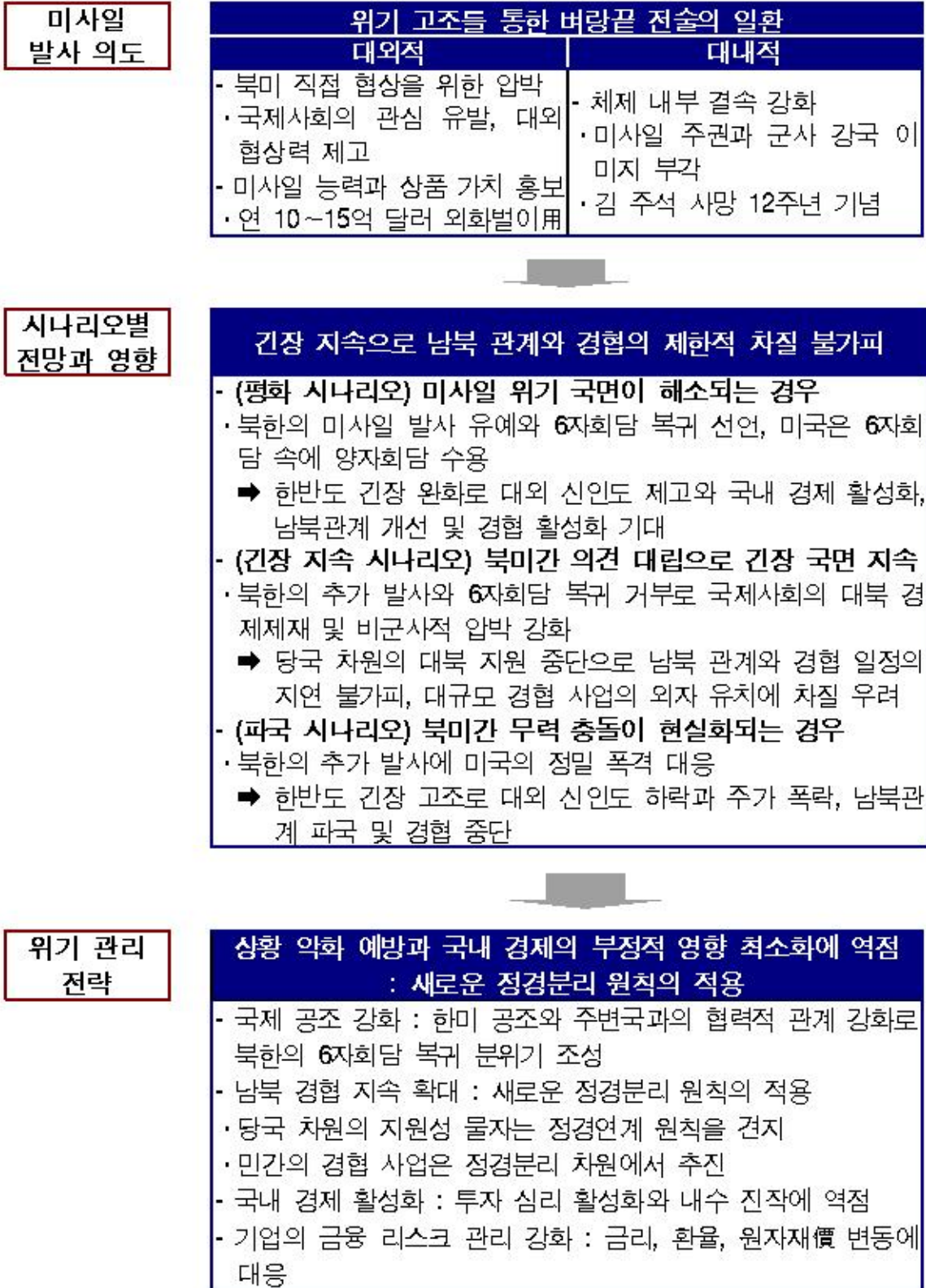
따라서 국내 경제와 남북 경협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사일 발사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미공조와 주변국과의 협력적 관계 강화를 통해 상황 악화 방지 및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뒀야 한다. 미국에게는 '6자회담 속의 양자회담' 수용을 촉구하고 북한에게는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 회원국들에게는 체제 전환 등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정경분리 원칙의 적용으로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역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당국 차원의 경제 지원은 정경연계 원칙을 견지하되, 민간의 경협 사업은 정경분리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당국 간의 대화 중단과 한반도의 긴장 고조 우려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규제 폐지와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 등 투자 심리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은 위기 고조시 금리, 환율, 원자재가의 급등락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금융 및 원자재가 위험 관리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영향과 대응



□ 북한 미사일 발사의 영향과 대응

1.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현황과 의도

○ (현황) 북한이 5일 7기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위기감이 고조됨

- 발사된 미사일은 대포동 2호의 장거리 미사일 1기와 스커드 및 노동급의 단·중거리 미사일 6기 등 총 7기임
- 대포동 2호는 엔진 및 주유 과정상의 결함으로 발사 후 40여 초만에 동해상에 추락하여 실패한 것으로 추정
- 일각에서는 미국을 의식하여 사거리를 제한한 '의도된 실패' 가능성 제기
- 현재 발사대에 장착된 2~3기는 추가 발사 가능한 상태

○ (의도) 위기 고조를 통한 對美 직접 협상 압박용과 미사일 개발 능력 과시,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 등의 목적이 복합적으로 포함

- 첫째, 미사일 발사라는 북한식의 '대담한 접근법' 시도를 통해 북미 직접 협상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의 일환으로 평가
- 인권과 위폐로 인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국면을 미사일이란 새로운 카드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유도하고, 핵보유국 선언(2005. 2)에 이어 실제로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
- 특히 발사 시점이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의 발사 시간 등 미국의 축제일과 림팩 기간(2006 환태평양군사훈련 : 6. 25~7. 29)에 맞췄다는 점에서 대미 협상 타개를 노린 측면이 강함
- 북한은 지난 6월 23일 림팩에 대해 "다국적 북침 전쟁 연습이라면서 '강력한 자위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림팩(RIMPAC : RIM of the Pacific Exercise, 환태평양군사훈련) : 유사시 태평양 상의 중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태평양 연안국 해군간의 연합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1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는 다국적 해군 연합기동훈련임. 한국은 1990년부터 참가하였으며, 올해는 한·미·일, 호주 등 8개국이 참가

- 둘째, '군사 강국' 이미지를 통한 내부 체제 결속 강화 목적도 포함
 - 미사일 주권과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김 주석 사망 12주기(7. 8)를 앞두고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내부 체제 결속을 도모
- 셋째, 대외적으로는 미사일 개발 능력 과시를 통해 미사일 상품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은 세계 6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로열티 및 부품 수출로 연 10~15억 달러의 외화를 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외화 손실을 보전하면서도, 미사일 발사 유예에 대한 미국의 경제 보상을 염두에 둔 의도로도 해석됨

< 북한의 미사일 보유 현황 >

	스커드 C	로동1호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대포동 2호 개량형
사거리(km)	500	1,300	2,200~2,900	4,300~6,000	6,000~15,000
추진 장치	1단 로켓 (액체 연료)	1단 로켓 (액체 연료)	2단 로켓 (액체+고체)	2, 3단 로켓 (액체+고체)	2, 3단 로켓 (액체+고체)
배치 여부	실전 배치 (1989년)	실전 배치 (1999년)	시험 발사 (1998년)	시험 발사 (2006년)	개발중(추정)

주 : 이외에 사거리 500km 이하의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은 실전 배치 상태임.

2. 위기시 파급 영향

1)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외 금융 시장 동향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내외 금융 시장은 일제히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음

- **국내 금융 시장** :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직후인 7월 5일 국내 금융 시장은 외평채 가산 금리 상승, 환율 상승, 주가 하락 등의 양상이 나타남
 - 대외신인도 : 외평채 가산금리(2025년 만기)는 7월 5일 현재 약 100bp로 전일의 97bp보다 3bp가 상승함
 - 환율 : 7월 6일 장 초반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급상승하였으나 수출업체들의 대금 결제 수요 등으로 소폭 상승하여 950원대 근접
 - 주가 : 7월 6일 종합주가지수는 국내 기관들의 저가 매수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로 7월 4일 보다 21.9p 하락한 1,264.0을 기록
- **국제 금융 시장** :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나타냈으며 국제 유가는 국제 정세 불안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 일본 엔화의 경우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인접해 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상당폭 약세를 나타내며 7월 6일 현재 달러당 115.64엔을 기록
 - 국제 유가는 국제 정세 불안의 여파로 사상 최고 수준인 배럴당 75달러대를 돌파(WTI 현물 기준)

< 최근 국내외 금융 시장 주요 지표 추이 >

	지표	7.4(A)	7.5	7.6(B)	B-A
국내	외평채 가산금리(bp)	97	100	-	-
	원/달러(원)	943.4	946.7	949.5	6.1
	KOSPI	1,285.9	1,279.9	1,264.0	-21.9
국외	엔/달러(엔)	114.82	115.73	115.64	0.82
	유가(WTI, \$)	73.93	75.19	-	1.26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2) 시나리오별 전망과 영향

○ (전망) 향후 위기 국면은 크게 3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음

- **평화 시나리오** : 미사일 위기 국면이 해소되는 경우
 -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와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미국이 6자회담 속의 양자회담을 수용
- **긴장 지속 시나리오** : 북미간 의견 대립으로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경우
 - 북한의 추가적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무력을 행사하지는 않으나 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 **파국 시나리오** : 북미간 충돌이 현실화되는 경우
 -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해 미국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지에 정밀 폭격(surgical strike)을 시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 (영향) 파국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대외 신인도 추락, 주가 폭락과 금리 상승, 남북 관계 파국 및 경협 중단 우려

- 평화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으로 대외 신인도 제고와 국내 경제 활성화, 남북 관계 개선 및 경협 활성화 기대
- 긴장 지속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당국 차원의 대북 지원 중단, 남북 관계 및 경협 일정의 지연 불가피

< 시나리오별 영향 >

	평화 시나리오	긴장 지속 시나리오	파국 시나리오
국제 정세	- 핵·미사일 문제 해결로 한반도 긴장 해소 - 6자회담 재개	- 한반도 긴장 상태 유지 - 6자회담 교착 상태	- 한반도 위기 고조
남북 경협	- 경협 확대	- 경협 정체	- 경협 중단
금융 시장	- 금리 상승 - 환율 하락 - 주식시장 급등	- 금융 시장의 변동성 증대	- 금리 급등 - 환율 급등 - 주가 급락
실물 시장	- 경기 확장세로 반전 - 대외 신인도 향상 - 경제 심리 개선	- 경기 둔화 지속 - 경제 심리 불안	- 장기 경기 침체 - 대외 신인도 급락 - 경제 심리 냉각

< 참조 > 주요국의 반응과 대북 예상 제재 조치

- (주요국 반응) 미·일이 가장 강력히 반발하면서 UN 안보리 회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는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체제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음
 - 미국·일본·영국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상품 및 기술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마련 중
 - (미국) UN 안보리 회부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 성명 등 국제사회를 통해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가되, 파국 상황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
 - ⇒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 행위'이나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무력 사용보다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해제했던 대북 제재 조치의 부활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T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엄격한 적용과 북한 선박의 검색 나포 등이 예상
 - (일본) 가장 강력히 반발하면서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등 9개항의 즉각적인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음 (⇒ <참고 2> 참조)
 - ⇒ 추가적인 대북 송금 규제 및 북한 자산 동결, 수출입 규제 등의 제재를 검토 중에 있음
 - (중국) 비공식 6자회담을 제안해 높은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의장국으로서의 중재 역할 약화를 초래하여 당혹스러운 입장
- (안보리 전망)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회부가 예상되나, 회부되더라도 안보리 '결의'보다는 '의장 성명'이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선언적 의미의 '의장 對언론 성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임
 - 미국, 일본, 영국은 의장 성명이나 결의(제재, 비난) 수준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려고 할 것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어려울 것임
 -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법적 처벌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대포동 2호의 실패로 1차 때보다 위협 수준도 낮은 상황임

3) 종합 평가

○ 이번 발사는 미국의 강경파 득세와 북한의 핵 개발 능력 보유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 때보다 다소 심각한 상황임

- 따라서 국제사회의 UN 안보리 회부와 대북 경제제재 강화 가능성이 높음
- 만일 이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의 추가 발사와 부품 및 기술 수출로 대응할 경우에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 국내 경제 및 남북 경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한국 경제** : 남북 관계의 긴장 고조와 한반도의 불안정성 증대로 대외 신인도가 낮아짐으로써, 해외 차입 여건 악화, 주가 하락과 투자 심리 저하 등을 초래하여 내수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
 - 과거 경험상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신용 등급이 한 단계 하락할 경우 외화 차입 금리가 35bp 정도 상승
 - 2005년 대외채무 중기분 17751억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신용등급 한 단계 하락으로 인한 추가 이자부담은 약 6,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 **남북 경협** : 당국 차원의 대북 지원 중단으로 남북간 대화 중단과 기합의 사항의 이행 지연 등으로 위축될 전망
 - 특히, 금강산·개성·육로 연결 등의 3대 경협사업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등 대규모 경협 사업의 외자 유치와 진전에 차질이 예상됨
 - 또한,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한미 공조의 부조화로 한미간에 갈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한미 FTA와 개성공단 원산지 협상의 장기화 및 개성공단 분양 지연 등의 우려 존재

< 북한의 미사일 1·2차 발사 위기 비교 >

1차 위기(1998. 8. 31)	변수	2차 위기(2006. 7. 5)
빌 클린턴(민주당), 온건파 득세	미 정권	조지 부시(공화당), 강경파 득세
북미 미사일 협상을 앞두고 갈등(미사일 후발국들의 개발확산방지)	북미 관계(대북 시각)	핵 타결, 체제 전환 및 정권 교체 등을 위한 대북 공세 강화(악의축, 反테러·반WMD 확산)
김대중 정부의 '해별 정책' 집권 초기	남북 관계 남한 정세	포용정책 기조 유지, 교류 확대 집권 후기
체제 결속(김위원장 재추대, 98. 9) 미사일 수출 중단 대가 요구	발사 목적	북미 직접 대화 촉구 대북 금융제재 해제 요구
냉각기 후 북미 갈등 진정(대북 경제제재 완화 v.s.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	발사 이후(발사 대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 강화 남북 관계 악화
대포동 1호	미사일 종류	대포동 2호, 스킨드·노동급

3. 위기 해소 전략

- (국제 공조 강화) 한미 공조와 주변국과의 협력적 관계 강화를 통해 상황 악화 방지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분위기 조성에 역점
 -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남북 양자간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인 이슈이므로 남북 공조와 국제 공조 조화 속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
 -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명분 제공 차원에서 미국에게는 '6자회담 속의 양자회담' 수용을 촉구하고, 북한에게는 미사일 발사 중지 선언을 유도
 - 다음으로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국들이 북한의 '합리적 우려'(체제 전복)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
 - 또한, 굳건한 한미일 공조 체제 강화로 핵 및 미사일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비
 - 더 나아가 최근의 북중간 경협 확대를 고려하여 남·북·중 3국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 문제 해결에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
- (남북 경협 지속 확대) 새로운 정경분리 원칙의 적용으로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역할 제고 방안을 강구
 - 당국 차원의 지원성 물자는 정경조화 원칙을 견지하되, 민간의 경협 사업은 정경분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정경분리 원칙의 적용이 요구됨
 - 당국 차원의 대북 지원 중단을 통해 북한의 위기 고조에 대한 명확한 경고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 민간의 경협 사업은 자율적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당국간 대화 중단과 한반도의 긴장 고조 우려를 완화해야 할 것임
- (국내 경제 활성화) 국내외 경제 불안 요인 속에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투자 심리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출자총액제한제 등 기업 규제 폐지, 건설 경기의 연착륙 유도, BTL(임대형 민자사업 : Build Transfer Lease)과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 추진
 - 기업들은 위기 고조시 금리, 환율, 원자재價의 급등락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금융 및 원자재價 위험 관리 기능을 제고해야 함

홍순직 수석연구위원(3669-4182, sjhong@hri.co.kr)

< 참고 1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주요 일지

일 시	주 요 내 용
1975년	- 중국에서 액체연료 사용 탄도 미사일 DF-61 구입 · 미사일 연구 개시
1981년	- 이집트에서 스커드 B형(R-17E) 미사일 및 발사대 24기 도입 · 모방 생산 착수
1984년	- 사거리 280km의 개량형 스커드 A형 개발 및 발사 시험
1985년	- 사거리 320~340km 개량형 스커드 B형 미사일 개발
1989년	- 사거리 500km 스커드 C형 미사일 개발
1993년 5월 29일	-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 1호' 동해상 발사 · 사거리 1,300km 추정
1998년 6월 16일	- 조선중앙통신이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인정
1998년 8월 31일	- '대포동 1호' 발사 ·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1호' 발사 주장 · 사거리 1,800~2,500km, 무게 25톤(추정), 3단식 미사일
1999년 9월 4일	- 북한 '인공위성 발사' 발표
1999년 9월 12일	-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 ·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한다는 북미 합의 결과
2001년 5월 3일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EU 의장국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 요 란페르손 스웨덴 총리에게 '2003년까지 시험발사 유예' 선언
2002년 9월 17일	- 제1회 북일 정상회담 결과 '평양선언' 발표 · '북한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 보류를 2003년 이후로 더 연장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 삽입
2003년 2월, 3월	-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발사, 사거리 100km
2003년 4월	- 실크웜 미사일 시험 발사 · 서해상에서 육지로 발사, 사거리 60km
2003년 10월	- 동해안에서 동해 상으로 중국제 실크웜 추정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2004년 5월 22일	- 제2차 북일정상회담에서 북일 평양선언 내용 재확인
2005년 2월	- 핵무기 크기의 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주장 대두 · 미국 중앙정보국 포터 고스 국장
2005년 2월 10일	- 핵 보유 선언
2005년 5월	- 동해상에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인 KN-02 발사
2005년 6월	- 미국과 수교하고 우방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한 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미사일만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모두 폐기 하겠다 · 방북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
2006년 6월 1일	- 미국이 압력 강화를 지속하면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2006년 5월 19일	- 일본 언론, 북한 대포동 2호 시험발사 준비 언급
2006년 6월 12일	- 미국 관리, 북한의 ICBM 시험발사 가능성 언급
2006년 7월 5일	- 대포동 2호 1기와 노동 및 스커드급 6기 등 총 7기 발사

< 참고 2 > 일본의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조치 9개항

구 분	내 용
대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측에 엄중 항의하고 미사일 개발 중지, 폐기, 수출 금지를 요구 - 만경봉92호의 6개월 입항 금지 - 북한 당국 직원의 입국은 원칙상 금지하고, 기타 북한으로부터의 입국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적을 둔 어선이 일본에 입항할 경우 승무원 등의 상륙은 원칙 금지 - 주일 북한 당국 직원의 도항처가 북한일 경우 재입국을 원칙상 금지 - 일본의 국가공무원의 북한 도항을 원칙상 보류하고, 일본에서 북한으로의 도항 자제를 요청 - 일본과 북한과의 항공편에 대해 원칙 입국 금지 - 북한의 향후 동향을 살피면서, 차후의 조치를 검토함
국제사회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마땅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홍보 - 6개국 협의 관계국간의 협의, 주요국 수뇌회의 등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조정과 정보교환을 수행

< 참고 3 > 과거 한반도 정세 불안시 국내 경제 파급 영향

○ 과거 한반도 정세 불안 시기에 금융 시장은 일시적으로만 변동성이 확대 되었으며, 실물 경제는 경상수지와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냄

- 국내 금융 시장 영향 미미 : 과거 한반도 정세 불안 시기의 국내 금융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1~2주 안에 파급 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분석됨
 - 과거 한반도 정세 불안 시기에 국내 금융 시장은 대체로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가장 최근인 2005년 2월 11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나타내는 외평채 가산금리가 소폭 상승

< 한반도 정세 불안 시기 전후 금융 변수 추이 >

시 기	금융 지표	1주일 전	당일(또는 익일)	1주일 후	2주일 후
대포동 1호 발사 (98.8.31)	금리	12.8	11.7	12.2	13.5
	원/달러	1,306.0	1,350.0	1,343.0	1,388.0
	KOSPI	316.6	310.7	328.2	314.2
핵 봉인 제거 (02.12.23.)	금리	5.87	5.82	5.71	5.67
	원/달러	1,203.1	1,201.7	1,197.0	1,188.9
	KOSPI	708.1	691.4	627.6	666.7
NPT 탈퇴 선언 (03.1.10)	금리	5.67	5.54	5.45	5.41
	원/달러	1,196.9	1,178.7	1,173.5	1,170.8
	KOSPI	661.1	628.4	636.5	609.4
핵 보유 선언 (05.2.11)	금리	5.42	5.32	5.29	5.29
	원/달러	970.3	967.8	972.8	966.4
	KOSPI	1,333.5	1,335.2	1,332.7	1,365.8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주 : 금리는 회사채 3년 만기(AA-)임.

- **경상수지 및 성장률 악화** : 한반도 정세 불안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던 당분기에 비해 다음 분기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경상수지** : 1차 대포동 발사, 핵 봉인 제거, NPT 탈퇴, 핵 보유 선언 등의 4대 주요 사건에서 NPT 탈퇴를 제외하고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성장률** : 핵보유 선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당분기보다 다음 분기의 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북한 관련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실물 지표들이 악화된 것은 외환위기, 소비 버블 문제 등 국내적 요인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음

< 한반도 정세 불안 시기 전후 경상수지 및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억 달러, %)

주요 사건		전분기	당분기 (A)	+1분기 (B)	B - A	비 고
경상수지	1차 대포동 발사 (1998.8.31.)	110.1	97.4	89.1	-8.3	외환위기
	핵 봉인 제거 (2002.12.23.)	5.5	18.8	-15.6	-34.4	소비버블
	NPT 탈퇴 (2003.1.10.)	18.8	-15.6	25.7	41.3	수출호조
	핵 보유 선언(2005.2.11.)	73.3	58.8	26.0	-32.8	유가급등
경제성장률	1차 대포동 발사 (1998.8.31.)	-7.9	-8.1	-6.0	-	외환위기
	핵 봉인 제거 (2002.12.23.)	6.8	7.5	3.8	-3.7	base effect
	NPT 탈퇴 (2003.1.10.)	7.5	3.8	2.2	-1.6	투자부진
	핵 보유 선언(2005.2.11.)	3.3	2.7	3.2	+0.5	경기적 반등

자료 : 한국은행.